

한-에콰도르 수교 50주년(1962-2012): 대에콰도르 대외정책 분석*

유영식**
단국대학교

유영식(2014), 한-에콰도르 수교 50주년(1962-2012): 대에콰도르 대외정책 분석.

초 록 2012년 10월 5일 한국과 에콰도르가 외교관계를 수립한지 50주년이 되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한-에콰도르 외교관계는 두 시기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962년 한국이 에콰도르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시기이며 1991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이 이루어진 시기에 해당된다. 당시까지의 대에콰도르 주요 외교 이슈는 냉전 유엔외교와 더불어 1970년대 중동 오일쇼크로 촉발된 원유수입 다변화정책에 따라 시행된 에콰도르산 원유도입에 중점을 두었다. 두 번째 시기는 통상·경제협력외교 강화시기에 해당되며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으로 다자 및 지역 경제협력 외교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렇듯 한-에콰도르 양국 관계는 한국의 대외정책이 반공이념에 기초한 유엔외교에서 경제적인 요인에 초점을 둔 경제통상외교로 전환되어 왔다. 2007년 코레아(Rafael Correa) 대통령 정권 출범으로 에콰도르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변화하기 시작했고 주요 외교 이슈인 한반도 핵문제, 교역불균형, 국제개발협력 규범 등에서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콰도르의 2008년 헌법의 고유 요소와 정부 대외정책의 기본노선으로 지향하고 있는 주권국가로서 대등한 관계와 상호호혜의 원칙 및 내정불간섭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양국관계 증진을 위한 기여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핵심어 외교, 한국-에콰도르, 양자 관계, 경제협력, 대외무역

* 이 연구는 2013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2013년 12월7일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LASAK)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논문임.

**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원 교수

I. 서론

1962년 10월 5일 에콰도르는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였으며 그로부터 50년이 흐른 2012년 10월에는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대통령 간에 이를 기념하는 축하의 메시지를 교환하기에 이르렀다.¹⁾ 비록 한국이 중남미국가 중 최초로 국교를 수립한 것은 1959년 브라질이나 에콰도르, 멕시코, 콜롬비아 등 중남미 15개 국가들과 수교를 한 것은 1962년의 일이다. 당시 브라질이 국제적으로나 중남미지역 내에서 가지고 있는 강대국 위상 등을 감안할 때 브라질과 최초로 외교관계 구축을 추진한 것은 향후 한국이 여타 중남미 국가들의 외교관계 수립 및 대외정책 추진에 있어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암묵적인 지원을 받기위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Jo 2009, 178).

한국의 외교는 초기에 ‘건국외교’와 ‘전시외교’를 시작으로 동서 냉전체제하의 남북 대립 상황에서 유엔을 통해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의 국제적 승인을 얻기 위한 인정투쟁에 주력하였으며, 그 후 남북 분단국으로서 소모적인 대결외교를 펼쳐왔고, 1990년대 들어 냉전이 해체되면서 국제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한국의 외교는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방위 외교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²⁾

대중남미 외교는 냉전시대 종식을 기점으로 남북한 대결구도의 유엔외교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 주로 남미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한 이민외교 그리고 경제·통상외교로 축약될 수 있으며(김원호 2009, 315), 양 지역 간의 협력은 개별 국가와의 정책협의회, 경제공동위원회, 자원협력위원회 등 양자 협력을 근간으로 한-SICA 대화협의체, 한-MERCOSUR 협의회 등을 통해서 다자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 Oficina Comercial del Ecuador en Corea(2012, 6-9).

2) 제1공화국에서 제6공화국까지의 외교정책에 관련해서는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 『한국외교사II』(1995, 309-477)에 포함된 고희주(309-337), 이택휘(339-377), 김용호(381-415), 김영식(417-449) 김성주(451-477) 참조.

지난 반세기 동안의 한-에콰도르 외교관계는 한국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냉전외교가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두 시기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962년 한국이 에콰도르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시점부터 1991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으로 냉전외교가 종료되는 노태우 대통령 재임기간 까지 해당된다. 당시까지의 대에콰도르 외교는 냉전 유엔외교와 더불어 1970년대 2차레에 걸친 중동 오일쇼크로 촉발된 원유수입 다변화정책에 따라 1980년부터 시행된 에콰도르산 원유도입에 중점을 두었다. 두 번째 시기는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의 출범부터 현재에 이르는 통상·경제협력외교 강화시기에 해당되며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으로 다자 및 지역 경제협력 외교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6년 9월 김 대통령의 과테말라,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등 중미와 남미 5개국 방문으로 국내에서 중남미 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중남미 방문국과 인근국가로부터 한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한 시기이다.³⁾

오늘날의 대외정책은 과거 정치, 군사 및 안보분야에 중점을 둔 것과는 달리 그 영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냉전시대 종식으로 국제관계는 경제·통상, 에너지·자원, 환경 분야의 이슈들이 외교정책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유승익 1998, 121). 한국과 에콰도르 간의 양자 관계도 앞에서 언급한 범주의 대외정책에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에콰도르와는 수교 초기부터 반공외교에 기초하여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정치적인 요인에 의한 협력이 주로 이루어 졌으며 1973년과 1979년 2차레에 걸쳐 발생한 중동 오일파동은 에콰도르가 한국의 상품 수출대상국에서 에너지·자원 공급국으로 변모시켰다. 이러한 양국의 교역관계는 2005년을 기점으로 에콰도르 산 원유수입이 중단되면서 대에콰도르 교역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

3) 이러한 정부의 한·중남미지역 간 정무·경제·통상관계를 확대코자하는 의지는 1996년 외무부의 조직개편으로 이어져 중남미국의 신설로 표면화되었으며, 중남미 지역의 중요성을 본격적으로 인식하고 대북미지역 외교와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대 중남미 외교를 효율적으로 전개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었고 수출은 급격하게 증가되기 시작했다. 에콰도르 정부는 중국, 한국 등 주요 교역국들로부터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국제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자 2009년 1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였고 한국의 대에콰도르 수출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이를 기점으로 한국은 WTO 등 다자기구를 통해 에콰도르의 대외통상정책을 면밀히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고, 에콰도르 측의 한국에 대한 무역불균형 축소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의 압력은 한국의 경제·통상외교에 대한 경계신호로 인식된다.

이렇듯 한-에콰도르 양국관계는 한국의 대외정책이 반공이념에 기초한 유엔외교에서 경제적인 요인에 초점을 둔 경제통상외교로 전환되어 왔다. 그러한 과정에서 상대국인 에콰도르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의 변화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입장에 대한 일방적 지지요청과 수출일변도의 대외정책을 시행해왔다. ‘수막 까우사이 사회주의(Socialismo del Sumak Kawsay)’⁴⁾를 근간으로 하는 2008년 신헌법에 의거하여 당선된 꼬레아(Rafael Correa) 대통령 정권의 출범이래 양국 간 주요 외교 이슈인 북한 핵문제, 교역불균형, 국제개발협력의 방향 설정 등에서 이견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에콰도르 정부의 대외정책 기본노선으로 지향하고 있는 주권국가로서의 대등한 관계와 상호호혜의 원칙 및 내정불간섭 등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대외정책을 추진할 시 양자 간 우호협력 관계는 한층 강화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2008년 에콰도르 신헌법 제1조에 성문화된 ‘다국민국가(Estado plurinacional)’와 ‘상호문화국가(Estado intercultural)’ 등의 원주민의 권리를 인정하 요소와 ‘자연의 권리(Derechos de la naturaleza)’를 다루는 제71-74조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한국의 중장기적인 대외정책 입안에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1959년 브라질과 최초로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한국과 라틴아메리카와의 관계에서 그동안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규모가 큰 국가들을 대상

4) 에콰도르의 수막 까우사이에 관련해서는 조영현, 김달관(2012) 참조.

으로 연구와 분석이 주로 이루어져왔다. 한국의 최초 FTA 체결 당사국인 칠레를 비롯하여 최근 페루와 콜롬비아도 한국과 FTA를 체결하여 양자 간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정부와 기업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학계에서도 이들 국가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안데스공동체 회원국인 에콰도르와 볼리비아는 공통적으로 좌파 정권이 집권한 국가이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Hugo Chavez) 정권의 그늘에 가려 이목을 집중시키지 못했다. 꼬레아 대통령이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3기 집권에 성공하고 중장기 국가발전계획을 추진하면서 에콰도르 정부가 한국을 자국의 경제발전 모델로 상정함에 따라 양국 간 상호관심이 증대하기 시작했다. 필자는 이러한 의미 있는 에콰도르의 변화를 수년에 걸쳐 직접 목도하면서 그동안 정치외교, 경제 등 분야의 연구가 미진했던 에콰도르를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한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한국과 라틴아메리카 간의 대외정책에 관한 연구와 달리 필자가 에콰도르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겪은 외교업무와 경험의 소산이 일정부분 반영되었다는 것이 다르다하겠다.⁵⁾

본고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62년 한-에콰도르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부터 수교 50주년에 이르기까지의 외교사적인 맥락을 고찰하는 성격을 띤 것으로 주로 한국의 관점에서 분석이 이루어짐에 따라 에콰도르의 대외정책 방향의 큰 전환을 가져온 꼬레아 정권의 외교정책 분석과 그와 관련된 충분한 자료 제시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연구는 보다 충실하고 검증된 자료를 근거로 한 후속연구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는 한국이 지난 50년 동안 추진해온 대에콰도르 대외정책의 분석을 위해 우선적으로 양국이 공유하는 협력의 요인에 기초를 두었으며 외교관계

5) 한국과 라틴아메리카 간의 대외정책에 관한 연구로서는 브라질을 대상으로 소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조희문 2008; Jo, Hee-Moon 2009; 임두빈 2011). 필자는 2008년 6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주에콰도르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참사관 겸 차석으로 근무하면서 정무, 경제·통상 및 에너지·자원 분야 업무를 담당하였다.

수립과 유지를 위한 목적과 대에콰도르의 협력 요인 및 결과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과 에콰도르간의 외교관계에 대한 이익을 평가하고자 했다. II장에서는 대외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엔을 통한 반공외교, 대외적 요인에 의한 석유자원 외교, 경제·통상과 개발협력외교 및 새롭게 고려해야할 요소로서 다국민국가와 상호문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III장에서는 대외정책 방향 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을 논하며, 결론으로서 한국과 에콰도르의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전략적 협력관계로 격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다변화된 대외정책의 필요성에 초점을 두었다.

II. 한국의 대에콰도르 대외정책

1. 대외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의 대에콰도르 외교는 이민외교를 제외하면 서론에서 언급한 대중남미 외교와 유사한 범주 내에서 추진되었으며 냉전체제 하에서 주요 외교 이슈는 유엔을 통한 반공외교와 1970년대에 2차례 발생한 중동 발 오일 파동으로 인해 1980년부터 에콰도르산 원유를 수입하면서 대에콰도르 교역이 상품수출 위주에서 에너지자원 수입으로 전환되는 석유자원외교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의 대에콰도르 외교정책 패러다임은 1970년대 수출제일주의 외교목표 하에 추진된 경제적 진출외교를 시작으로 남북한의 유엔가입이 안보상황의 개선을 가져오게 되자 경제·통상 및 개발협력분야로 변화하고 있다. 본장에서는 한·에콰도르 양자관계에 있어 냉전체제하에서의 주요 외교협력 이슈와 냉전외교 종료 이후의 통상·경제협력외교 중점 시기의 주요 외교협력 이슈와 요인에 대해 살펴보하고자 한다.

1) 냉전체제하의 주요 외교 이슈

(1) 유엔을 통한 반공외교

정부 수립 이후의 한국의 외교적 특성은 승인외교로서 국제적으로 합법정부로서의 대한 지지를 얻는 것이며 남북한의 대결외교와 반공외교 전개를 위

해 국제무대를 이용하였다. 신생정부인 한국은 유엔을 국익증진을 위한 유일한 외교의 장으로 인식하고 유엔외교를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그에 대한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 외교의 형태는 유엔 의제와는 거리가 있는 남북한 대결구도 하에 한반도 관련 남한 입장과 유엔가입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백진현 1999, 301).

1948년 12월 제187차 유엔총회에서 결의안 195(III)호를 통해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유일하고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을 받았다. 에콰도르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를 공식 승인한 것은 1949년 10월 4일 빨라사(Galo Plaza) 대통령 정권에서의 일이며 양국은 1962년 10월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냉전체제 하에서 한-에콰도르간의 정치적인 협력요인은 남북 대결외교에서 반공이념과 평화통일노선에 대한 지지 획득을 위한 노력은 에콰도르의 대북한 수교 지지 노력에 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동서 냉전체제에서 이념적으로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까닭에 중남미 지역에서의 대결외교는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1959년 까스트로(Fidel Castro)의 쿠바 사회주의 혁명은 중남미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쳤으며 1964년 브라질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인근 국가인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등 다수의 국가들에 경제발전을 통한 국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극우파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한국의 외교환경이 개선되는 결과를 가져와 1960년대 전반에는 유엔 내에서 한반도 관련 안건이 제출될 시 중남미 국가들은 압도적으로 한국 입장을 지지하였다(김원호 2009, 315-316).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 들어 까스트로 정부의 영향력과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에서 좌파정권이 탄생하면서 북한은 이들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카리브 국가까지 외교 영역을 확대해 갔다.⁶⁾ 북한의 이러한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세력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도 카리브 국가들에 외교력을 집중

6) 북한의 중남미 외교가 본격화되어 쿠바, 아르헨티나, 칠레를 포함하여 니카라과, 세인트루시아, 코스타리카, 가이아나, 자메이카,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등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하여 외교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하였다.⁷⁾

1970년대 데탕트 분위기 확산과 함께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서 비동맹 중립 외교 확대를 목적으로 ‘합슈타인 원칙’을 포기하고 1973년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⁸⁾ 선언으로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국가에도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975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비동맹 외무장관회의에서 남한의 가입은 불발되고 북한 단독 가입이 승인됨으로써 한국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Chung 1985, 120-124). 따라서 당시의 제3세계 국가에 대한 한국의 궁극적인 외교활동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한국 관련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얻는데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남북 분단과 미국과 의존적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특수한 외교환경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특수성에 영향을 끼쳐온 변수로는 한반도 주변국들에게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지정학적 요인’, 끈임 없는 외침의 ‘역사적 요인’ 그리고 적대적 대립의 ‘이념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 전쟁에 의한 분단으로 극한 대치 상황의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적대적인 이념적 대결이 시작되면서 반공주의를 채택하여 명백한 흑백논리에 기초한 외교를 전개하면서 소모적인 외교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한 국가의 외교는 대외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적절한 변화를 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남북 분단의 대립이라는 특수한 외교환경으로 인해 대외적 변화에 걸맞은 변화와는 거리가 먼 제한적인 변화만 있어온 게 사실이다(김계동 1998, 102-108).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냉전시대 한국의 유엔외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확보와 남북한 대결에서 우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외교를 지향하였다면

7) 1974년에 그레나다, 1975년 수리남, 1977년 바베이도스, 1978년 도미니카연방, 1979년 세인트루시아, 1979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스와 국교를 수립하였다.

8)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 성명’은 남북한 상호 불간섭·불가침, 남북한 유엔 등 국제기구에의 동시가입, 대공산권 문호개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북한 통일 시까지 과도적 기간 중의 잠정조치이다. 국토통일원(1988, 35-36), 외무부(1990, 412-417) 참조.

‘6·23 평화통일 선언’ 이후에는 유엔에서 더 이상 소모적인 남북한 대결외교를 자제하고 유엔가입 노력도 더 이상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외교로 변모하였다. 이후 동서 냉전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한 1980년대 말부터 한국의 유엔외교는 활력을 찾았고 1991년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 이후의 한국 외교는 더 이상 북한과의 대결외교가 아닌 유엔 발전을 위한 기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역할 확대와 유엔에서 논의되는 글로벌 이슈에서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백진현 1999, 301-302).

그러나 남북 분단, 전쟁의 위협, 대치상황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최근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와 직결된 북한의 핵실험과 천안함 피폭,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의 요인들은 유엔 등 국제무대를 통한 한국의 외교를 대결외교에 다시금 얽매이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2007년 에콰도르에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좌파 꼬레아 정권이 탄생하고 2008년 제정된 신헌법에 따라 전 세계의 모든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북한은 에콰도르와 수교를 추진하기 위해 북한 외무성 부상 및 노동당 관계자를 파견하였다. 북한은 수교 추진 취지를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로서 공유하는 공동의 가치를 구현하기를 희망하였고 에콰도르 외교부와 집권여당 조국동맹(Alianza PAIS)의 외교라인에서 수교추진 여부를 검토했으나 꼬레아 대통령의 지시로 중단되었다. 북한의 핵실험, 무력도발 행위 등에 대한 국제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목적으로 에콰도르측에 대북한 비난을 성명을 발표하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에콰도르 외교부는 대북성명 대신 보도자료 형식을 통하여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은 한국 정부가 기대했던 바와는 거리가 먼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했다. 특히 북한 핵실험에 대한 입장은 기존 핵을 보유한 국가들의 비핵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충격적이었다. 이는 그동안 한국이 중남미지역의 전통적 우방국을 대상으로 전개해 온 일반화된 외교정책 추진방향에 따라 한반도 안보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실험 및 비핵화 등의 민감한

국제이슈에 대해 좌파 꼬레아 정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이다. 에콰도르를 비롯하여 좌파 이념을 공유하고 있는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등 볼리바르 동맹(ALBA) 회원국들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하여 거의 유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반공이념에 근거한 대북한 이슈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요청은 중남미가 아무리 역사와 문화적으로 동질감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중남미를 일반화하여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에콰도르를 위시하여 중남미 각국 정부의 이념과 외교노선을 고려하고 ALBA, 남미국가연합(UNASUR) 등 지역 그룹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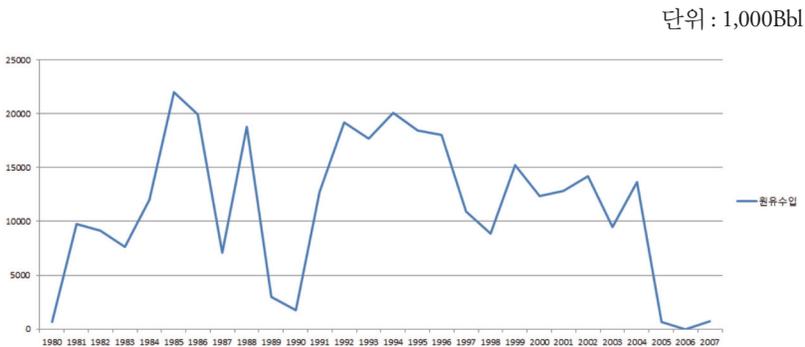
(2) 대외적 요인에 의한 석유자원외교

1970년대 한국 정부는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함에 따라 제3세계는 물론 공산권에 대해서도 다변화된 경제실리외교를 전개했으며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중남미 등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자원협력외교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한국이 1960년대 초반 경제발전과 공업화를 이룩하면서 석유 등 광물자원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져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반에 들어 자원외교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으로 한국은 중동지역에 대한 자원외교를 적극 전개한 결과 석유공급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동 의존도가 100%에 달하는 위험한 상황을 자초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은 한국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줌에 따라 석유공급을 다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동남아와 중남미지역을 새로운 석유공급원으로 설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이민룡 1998, 291-293). 정부는 원유도입선 다변화 정책을 시행하여 1980년부터 에콰도르, 멕시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석유를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 말에는 대중동 의존도가 60% 대로 낮아지기도 했다(이민용 1998, 346-348). 이로써 에콰도르는 한국의 상품 수출 대상국에서 에너지원 공급국가로 지위가 전환되면서 양국관계는 그동안 정무

분야에 치중되었던 협력이 자원분야의 협력으로 확대되면서 교역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1980년부터 2005년까지 지속된 에콰도르 석유자원 도입외교는 냉전체제하의 유엔을 통한 반공외교와 냉전 이후의 경제·통상 외교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수행하였다.

에콰도르는 1973년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가입하여 회원국으로 활동 중에 국내외 정치적인 이유로 199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자격정지 상태에 있다가 자격이 회복된 국가로서 2010년에는 OPEC 의장국 역할을 수임하여 기구 내에서 굳건한 입지를 구축하였다.⁹⁾ 에콰도르의 OPEC 복귀는 창설회원국인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이 기구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힘을 실어주기위한 좌파성향의 남미 회원국의 복귀를 통한 정치적 연대라 할 수 있다. 에콰도르가 한국의 새로운 원유 공급원으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추진코자 했던 석유도입은 에콰도르국영석유공사(Petroecuador)측이 공사대 민간의 거래방식을 선호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민간 종합상사를 통해 1980년부터 원유를 수입하기 시작했다.

에콰도르산 원유 수입 1년만인 1981년에는 연간 599만 배럴을 초과하였으



〈그림 1〉 1980-2007년 간 에콰도르산 원유도입 현황

자료원 : 한국석유공사 정보망(Petronet.co.kr) 자료 재구성

9) 에콰도르는 OPEC 회원국 중에서 석유매장량이나 생산량 기준으로 본다면 소국에 속한다. 2013년 OPEC 통계자료에 의하면 석유확인매장량은 82억 배럴, 일일생산량은 504천 배럴에 달한다.

며 수입 규모는 계속 증가하여 1985년 연간 2천 198만 배럴로 정점에 이르렀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7년과 1989년 등 몇 해 동안 수입이 급감하기도 하였으나 연간 1천 2백만 배럴에서 1천 9백만 배럴 수준에서 수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부 주도로 시행해오던 원유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지원금 제도가 2003년 폐지되면서 에콰도르산 원유수입에 유조선 운송 운임 증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국내 정유업계의 관심은 점차 저조해졌고 에콰도르국영석유공사는 2005년에 현물시장거래를 위해서 한국 정유회사와의 장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한국과의 거래가 중단되었다. 에콰도르산 원유가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양국 간 교역량은 1980년 기준으로 대에콰도르 수출액이 1천 891만 달러, 수입액은 2천 340만 달러 규모로 교역의 균형이 유지되었으나, 원유를 수입하면서 한국은 대에콰도르 교역에서 1981년부터 2004년까지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을 제외하고 매년 무역수지에서 적자를 기록하였다.

국제 원유가격이 배럴당 26.7 달러에서 107.0 달러까지 상승한 세계 3차 유가 급등시기(2004-2008)와 최근 유가 폭등시기에 이명박 정권이 에너지·자원협력외교를 추진하면서 에콰도르산 중질유에 대한 수입과 아마존 남동부지역의 광구 탐사·개발 프로젝트 참여를 검토하는 등의 정책적인 시도가 있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경제적인 손익을 철저히 계산하는 민간 정유업계와 석유공사측의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정치적으로 성과만을 도출하려는 정부 측의 의욕을 앞세워 에너지협력 대표단을 파견한 결과이기도 하다. 1980년에 시작된 대에콰도르 원유수입이 순수한 정치적 논리에서 시작되었다면 25년간 지속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정부가 원유도입선 다변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민간 정유업계에 운송비용 보조금 지급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정유업계의 손실 요인이 없어졌기에 근거리의 중동이 아닌 태평양 저편의 에콰도르로부터 유황성분이 다량 포함된 중질유일지라도 수입을 결정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간기업의 경제적 이익이 정부의 정치적인 고려보다 우선시 되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국영기업은 특성상 일단 정책적 결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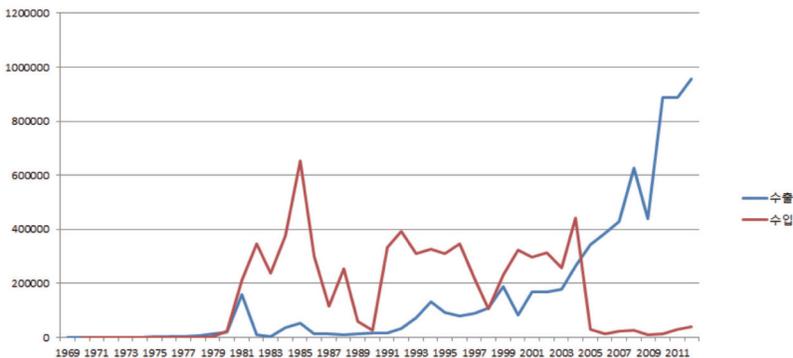
내려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초기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광구의 채산성이 낮다고 판단 될 경우에도 의사결정에 대한 조직의 경직성 때문에 쉽게 투자 중지나 철수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다면 더욱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2) 냉전종료 이후의 주요 외교이슈

(1) 경제 · 통상 및 개발협력외교

한국의 초기 경제외교는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경제의 재건을 위한 원조 획득에 중점을 두었으며 박정희 정권은 개발독재 하에 경제제일주의를 목표로 수출제일정책을 표방하면서 1970년대 경제발전을 위한 수출시장 확보 노력으로 이어져 대외경제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했다(박경서 1998, 243-244). 반면 1980년대까지 주로 1차 상품의 수출과 공산품의 수입대체를 추구한 중남미 국가들은 1980년대 후반 수출주도의 전략으로 전환하고 시장 지향적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역내 경제통합을 진전시킴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였다. 또한 중남미 국가들은 1차 단일상품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와 함께 교역국의 다변화도 적극 추진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게 그동안 '제한된

단위: 천불



〈그림 2〉 한국의 대에콰도르 수출입 현황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재구성

수출시장'이라고 여겨졌던 중남미지역에서 경제·통상, 투자, 대외원조 등 경제협력 확대가 이루어짐으로써 수출이 증가하여 무역흑자도 대폭 확대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대중남미 외교정책 방향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통상환경 개선과 중남미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김원호 2009, 318-322).

한국의 대에콰도르 대외정책은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정부분야의 치중되었으나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의 협력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미한 수준의 교역에 불과하였다.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의 계기로 시작된 에콰도르산 원유 수입이 1980년부터 이루어지면서 양국 간의 경제·통상관계는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는 달리 수입 위주로 본격화 되었다. 1993년부터 한국의 대에콰도르 수출이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 에콰도르의 금융위기로 인해 수출이 급감하기도 하였으나 2002년 들어 예년 수준으로 회복 되었다. 대에콰도르 교역에 있어 1980년부터 2004년까지 23년 동안 지속되어 온 무역적자가 2005년 에콰도르로부터 원유 수입이 중단되고 한국의 수출이 급성장하면서 무역흑자 기조로 빠르게 전환 되었다. 24년간 지속된 에콰도르산 석유자원 수입은 한-에콰도르 양국 관계를 정부분야 협력 중심의 외교에서 경제·통상 및 개발협력 외교로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대에콰도르 수출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원동기, 기계류, 철강관 등으로 다양해졌고, 2012년 양국 간 전체 교역규모는 약 9억 달러에 달했고 한국의 대에콰도르 무역수지는 8.1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이제 에콰도르의 7대 교역 국가 중의 하나로 성장하였다. 한국과 중남미 경제권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에콰도르가 점유하는 비중은 2009년부터 9억불 내외로서 계속 10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는 꼬레아 정부가 2009년 1월 에콰도르 국제수지의 심각한 악화를 이유로 627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면서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휴대폰, 고가 전자제품에 대한 수출이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러

한 세이프가드 조치와 같은 통상마찰은 양국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바, 통상환경 개선을 위해 에콰도르와의 FTA 체결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통상환경이 개선될 시 에콰도르의 경제상황이나 내수 시장 규모, 구매력, 소비성향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상품 수출은 한층 더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에콰도르 양국 간에는 국교를 수립한지가 50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무역 협정도 체결되어 있지 않다. 양국 정부는 현재까지 무역협정의 체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도의 차이는 서로 다르다. 이는 에콰도르 정부가 한국과 수교 1년만인 1963년에 무역협정 체결을 제의한데 이어¹⁰⁾ 2010년 ‘개발을 위한 통상협정(ACD: Acuerdo del Comercio para el Desarrollo)’ 체결을 한국 정부에 제의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에콰도르는 2007년 꼬레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에 의존한 전통적인 대외정책에서 탈피하여 유럽연합, 아시아·태평양, 중동 및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외교영역을 적극적인 경제·통상정책을 통해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개발경제학자인 꼬레아 대통령은 한국을 자국의 경제발전 모델로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에콰도르가 한국과 심각한 무역불균형을 겪고 있음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과의 통상협정¹¹⁾ 체결에 대한 검토를 경제부처 각료들에게 지시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표명해왔다. 에콰도르의 FTA 정책은 자국의 열악한 산업경쟁력을

10) 경제성장에 초점을 둔 한국 정부는 1961년 필리핀, 대만, 태국을 필두로 양자 간 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1962년 말레이시아와 1963년에는 중남미 최초로 브라질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정부는 에콰도르의 제의에 대해 양자 간 우호관계 증진과 남미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협정체결을 긍정 검토하였다. 그러나 에콰도르가 단일관세제도 및 수출입 허가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무역협정을 체결한다 해도 관세특혜가 불가하며 에콰도르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바나나, 커피, 코코아 등은 한국의 수입금지 품목으로 협정문 수출입 품목에 삽입이 불가함에 따라 더 이상의 협정체결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1) 2006년 미국과 추진하던 FTA 협상이 중단되자 2007년 출범한 꼬레아 대통령도 더 이상 미국과 협상을 추진하지 않아 양자 간 FTA 협상이 중단되었다. 그 후로부터 꼬레아 대통령은 신자유주의, 종속경제, 매국이라는 색채가 농후한 FTA라는 용어를 배격하고 무역협정 또는 통상협정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꼬레아 정권에서는 FTA라는 용어는 즉 친미주의자 또는 매국노라는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고려하여 일반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대신 개도국 간에는 ‘경제보완협정(ACE: Acuerdo de Complementación Económica)’을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는 통상적인 FTA에 개발원조 부문을 추가한 ‘개발을 위한 통상협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중남미 국가 중 경제규모가 큰 브라질, 멕시코를 비롯하여 FTA를 체결한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을 위주로 통상정책을 추진해왔고 상대적으로 내수시장이 적은 소규모 경제 국가들에 대해서는 교역불균형이 심화될 지라도 개선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에콰도르 정부는 무역불균형 축소를 위한 한국 정부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의 대에콰도르 통상정책에 대한 변화를 가져와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중남미를 포함한 제3세계에 대한 한국의 경제협력외교는 1980년대 개발도상국들과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에콰도르와는 1983년 한·에콰도르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과 1984년 어업협력협정 체결¹²⁾로 통상 중심의 양자관계가 경제협력분야로 확대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한국의 개발협력은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조성과 1991년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설립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대에콰도르 경제협력사업은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물자지원 및 중소기업 프로젝트 등 무상원조 위주로 추진되어오다가 1995년 중남미 최초의 유상협력 EDCF 사업이 에콰도르 정부에서 요청한 ‘지방전화망 확충사업’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면서 양자 간 협력 구도가 통상외교에서 경제협력외교로 확대

12) 한·에콰도르 어업협력협정은 1984년 5월 양국 정부가 서명한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의 부속 수산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체결되어 양국 수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자국수역 내에서 상대국 어선의 조업편의 제공, 전문가·훈련생 및 과학 정보교환, 수산업 분야 과학기술협력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농림수산식품부 2008, 437-438).

·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¹³⁾ 2002년 두 번째 EDCF 사업으로 ‘산토도밍고 시 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한 지원을 공식 통보하였으나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사업이 지체되다가 지난 2011년에서야 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¹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실질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EDCF 사업이 수원국인 에콰도르 산토도밍고 시에서 시장선거공약으로 이용되는 등 지나치게 정치쟁점화 되면서 사업의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에콰도르는 한국이 제공한 두 건의 유사 경제협력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회의(OECD/DAC)가 분류하는 저중소득국으로 분류되어 구속성차관 제공이 가능했으나 꼬레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정치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함으로써 고중소득국으로 분류되어 비구속성 차관 제공 대상국으로 변모하였다.

그동안 대에콰도르 유·무상 경제협력사업은 수원국의 경제·사회분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기본 취지보다는 공여국의 경쟁력이 확보된 분야의 산업을 위주로 국산품의 수출 및 홍보효과 제고가 가능한 사업을 위주로 추진해오면서 에콰도르 정부 측의 굶지 못한 시선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한 면도 있다. 이제 한국 정부도 개발협력 분야의 외교를 강화하고 있고 유엔 새천년 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해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개발 협력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선진공여국으로서의 지위에 걸 맞는 에콰도르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고 ‘좋은 삶을 위한 국가계획(Plan Nacional para el Buen Vivir)’에 기

13) 에콰도르 지방통신망 확충사업 규모는 1억 78백만 달러이며 한국정부가 지원한 1천 5백만 달러에 대한 EDCF 차관 조건은 이자율 3%, 상환기간 20년(5년 거치)의 장기 저리이다.

14) 산토도밍고 시 상수도 확충사업은 EDCF 사업에 대한 정부 보증 문제로 인한 지방 정부와 중앙정부간의 갈등으로 미뤄지다가 꼬레아 대통령 소속의 집권당 시장이 당선되면서 2011년 계약이 체결되었다. 총사업규모는 5천 690만 달러이나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차관 규모는 4천 360만 달러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13년 9월 에콰도르 정부가 요청한 제3차 EDCF 사업인 산토도밍고 시 하수도 확장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6,798만 달러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에콰도르는 총 3건의 EDCF 사업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1억 2천 661만 달러를 지원 받게 되었다.

여할 수 있는 방향의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새롭게 고려해야 할 요소: 다국민국가와 상호문화성

2007년 마나비주 몬테끄리스띠에서 개최된 제헌국회는 에콰도르를 ‘다국민국가’로 선언하였으며, 이는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사회 각계계층의 여론 수렴과 토론과정을 거쳐 탄생한 소중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역사적으로 에콰도르 국민으로서 철저히 배제되어온 원주민들과 아프리카계 후손들은 헌법에 ‘다국민성(plurinacionalidad)’의 개념을 포함시켰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에콰도르 최초의 원주민 봉기는 1990년 시작되어 2003년까지 거의 2년 주기¹⁵⁾로 계속해서 발생했으며, 이러한 원주민 운동은 다국민국가를 요구하면서 식민성을 탈피하려는 원주민의 극단적인 표출로 나타났다. 에콰도르에서 원주민 운동의 성과는 헌법에서 다국민국가를 성취하고 ‘국가와 정치에서 원주민의 가시성’을 확보한데 있다(김달관 2010, 51). 결국 에콰도르의 원주민 운동은 1998년 헌법에서 ‘복수문화(pluricultural)와 다종족(multiétnico)의 사회국가’로 구체화되었으며 2008년 신헌법에서는 ‘상호문화(intercultural)와 다국민(plurinacional) 국가’로 인정받고 성문화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¹⁶⁾ 아코스파는 “민주주의 부재라는 역사적인 문제와 인종차별주의가 팽배한 에콰도르와 같은 국가에서 다국민국가의 건설은 하나의 도전뿐만 아니라 필요성으로 변모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2009, 15). 이제 다국민성은 동일한 영토 안에 상이한 국민들과 부족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에콰도르 국민과 국가의 필요성으로 모두에 의해 이해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상호문화성은 ‘다양성속에서 통일(unidad en la diversidad)’을 이룩하려는 노력으로서 정치적 사회적 차원에서 제도와 구조적인 메카니즘으로 보호되는 문화적

15) 에콰도르의 원주민 봉기는 1990, 1992, 1994, 1997, 1999, 2001, 2003년에 일어났다.

16) 에콰도르의 ‘다국민성’과 ‘상호문화성’에 관련해서는 Larrea(2008), Acosta y Martínez(2009), 김달관(2011), 김윤경(2011) 참조.

들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혼혈인, 원주민 그리고 아프리카계 후손들의 요구를 통합하여 참여 민주주의 실천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다(Acosta 2009, 126).

2008년 신헌법에 의거하여 새로 출범한 에콰도르 정권은 다국민국가로서 원주민, 아프리카계 후손 등의 지위와 평등권을 보장하고 인종차별 극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이는 에콰도르에서 사회구조로 나타나는 차별과 배제가 역사적으로 볼 때 특히 원주민, 아프리카계 후손, 혼혈인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조영현 · 김달관 2012, 42)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문화성과 다국민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은 에콰도르 외교부에서 시행하는 2012년 직업외교관 선발시험에서 구체화되었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권리 하에 원주민 사회, 종족과 다국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공공행정에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게다가 선발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험과 면접을 거치되 원주민, 아프리카계 후손, 몬투비오(montubio)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2009년 에콰도르 외교부 고위급 인사에서 국제기구담당 차관보에는 원주민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다자차관보에는 아프리카계 혼혈 인사가 각각 보임되기도 했다.¹⁷⁾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 정권과 뜻을 같이하는 핵심인물을 정책결정 라인에 배치하기 위한 코드인사라고 비판하기도 하나 분명한 것은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후손의 위상이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졌고 국가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끼치는 세력으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에콰도르 외교는 과거의 패턴과는 달리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인권, 환경, 국제법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외교활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관련분야의 국제기구 이사국 임후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대에콰도르 대외정책을

17) 당시 국제기구담당 차관보는 원주민 권리 보호운동을 비롯하여 유엔 산하기구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원주민출신인 릴리아 로드리게스(Lilia Rodríguez)가 임명되었으며, 다자차관보에는 아프리카계 후손 혼혈의 정치인인 라파엘 킨테로(Rafael Quintero) 에콰도르 사회당총재가 임명되었으며 동인은 2010년 아시아 · 태평양 · 아중동 ·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를 역임했다.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2008년 헌법에 성문화된 다국민성과 상호문화성과 같은 요소들을 적절히 반영하여 새로운 한-에콰도르 외교 50년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III. 대외정책 방향의 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

1962년 한국과 에콰도르간의 외교관계 수립 이후, 냉전체제 하에서 한국의 외교는 유엔을 중심으로 반공이념에 기초하여 전개되었다. 이후 대외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분단 및 대치상황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무력도발 등의 심각한 사안들은 한국 외교를 다시기 대결외교로 회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전통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오며 우방국으로 간주되던 중남미지역에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반미 좌파성향의 정권들이 들어서면서 정치의 지각의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세계 평화와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핵실험과 비핵화 문제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 유엔 대북한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남미 각국 정부로부터 대북한 비난성명을 발표하도록 유도하여 다수의 중남미 국가들이 이에 적극 동참하였다. 그러나 에콰도르를 포함한 중남미 좌파국가 블록인 대부분의 ALBA 회원국들은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거나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발표함으로써 한국 정부를 당혹스럽게 하였다. 이는 중남미 국가들을 일반화한 한국의 대외정책을 좌파 정권이 들어선 국가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적용한데서 나온 당연한 결과라 볼 수 있다.

특히 에콰도르는 2007년 꼬레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에 의존한 전통적인 대외정책에서 탈피하여 독자노선을 추구하고 ‘시민혁명(Revolución Ciudadana)’을 통해 사회주의 건설을 지향하는 국가로서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외교 사안에 따라 신중하고 차별화된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 핵문제 등과 같은 민감한 외교 사안을 다룰 시 중남미지역의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접근보다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좋은 본보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중남미 국가들의 정치적 환경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여 대외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한다. 둘째, 외교부 등 대외정책 유관부처의 경직된 사고와 수행체계는 아직도 개별 국가 또는 지역그룹 국가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수립과 이행을 어렵게 하고 있는 바, 이를 극복해야한다. 셋째, 외교부 업무 목표와 성과 평가에 있어 외교업무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민간부문의 성과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일괄 적용함으로써 야기되는 폐단을 개선해야한다. 성과 위주의 외교업무 평가시스템은 외교공관 간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여 외교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명박 정권은 국제유가가 폭등하자 수차례에 걸친 대통령 특사단 파견을 통해 중남미 국가들에 대해 에너지협력외교를 추진하면서 한때 에콰도르산 중질유에 대한 수입과 에너지자원 자주개발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서 한국석유공사를 통해 아마존 남동부광구 탐사·개발 프로젝트 참여를 검토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에도 과거 30년 전과 같은 맥락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정부 주도로 추진코자 했으나 에콰도르산 중질유를 원거리에서 수입하는데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가 수반되지 않은 정부 정책에 민간기업의 호응이 없었던 것이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국내의 정유 업체들은 중동산원유 정제에 최적화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상대적으로 유황성분이 다량 함유된 에콰도르산 중질유를 정제하기 위해서는 탈황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여타 지역에서 수입된 원유와 혼합하여 중동산 원유와 유사하게 만들어 정제공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는 정제업체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하게 하여 경제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에콰도르 아마존 남동부지역 광구 탐사·개발 프로젝트 참여 검토도 기업의 자발적인 관심보다는 정치적인 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 문제라 하겠다.

이와 같은 에너지 협력외교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첫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민간 또는 국영기업 측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진 후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특히 유전 탐사·개발 프로젝트는 중장기에 걸쳐 많은 자본의 투자가 필요한 바, 사업 참여 조건이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석유 자주개발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에콰도르의 경우에는 석유탐사 및 채굴 프로젝트가 과거 참여계약에서 원유생산 서비스계약으로 전환되어 한국 기업의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셋째,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에 위치한 대형 유망 석유광구는 원주민 보호구역 또는 공동체 소유지, 국립공원 내에 포함된 경우가 있어 비재생에너지 자원의 탐사·개발 프로젝트 검토 시 환경보존과 원주민과의 상관관계를 적극 고려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아마존 지역의 에너지 자원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는 자연에 대한 피해는 물론 원주민의 삶과 터전 자체를 파괴하게 되고, 결국 원주민의 생태주의적 투쟁은 국가 통치성을 위협하는 단계에 까지 다다르고 있어(김기현 2011, 58) 사업의 추진이 불가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에콰도르 교역은 2005년부터 원유 수입이 중단되고 대에콰도르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무역적자에서 흑자기조로 전환되었으며, 한국은 에콰도르의 7대 교역 대상국으로 성장하여 2009년 양국 간 교역규모가 8.9억 달러를 정점으로 4년째 정체되어 있다. 세계 3차 유가 급등시기(2004-2008)에 이어 최근 유가 폭등시기로 황금기를 맞은 에콰도르 정부와 민간부문의 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 한국 등으로부터 상품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제수지가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이유로 콜레아 정부는 2009년 초 셰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고 수입쿼터제를 적용하면서 한국은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에콰도르 정부는 한국과의 무역불균형이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에 기인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무역수지 개선에 대한 정부차원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통상마찰 문제는 양국 간의 통상환경개선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 검토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에콰도르측이 제안한 ‘개발을 위한 통상협정’¹⁸⁾ 체결은 어렵다는 한국의 강경한 입장에 따라 한국과는 국제통상규범에 기초한 포괄적인 통상협정도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환하는 등 에콰도르 정부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양국의 합의하에 2013년 완료된 한-에콰도르 통상협정 체결을 위한 민간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협상개시 여부를 조만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에콰도르는 한국을 경제발전 모델로 삼고 있고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로서 전통적인 흑자시장이자 안데안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중요한 중남미 산유국이자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국으로서 자원의 공급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극심한 무역불균형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에콰도르는 역내 좌파정권 및 ALBA 그룹 국가들과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 국가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MERCOSUR 준회원국인 에콰도르는 정회원국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바, 향후 한국과 MERCOSUR와 FTA를 추진할 시 지지자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국가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 내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 GDP규모와 인구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 아무리 정부 및 경제·통상 분야에서 양자 관계가 긴밀하고 무역수지가 크다 할지라도 상대국에서 제안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또는 경제보완협정에 관한 공동연구나 협상 등은 사전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간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외교정책 사안에 대해 양자 관계측면에서 정부적인 고려를 우선시하는 외교부와 전적으로 경제적 논리를 앞세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간의 입장 차이는 극명하다. 로즈노는 그의 예비이론에서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정부요소라고 지적한 바 있다(Rosenau 1980, 128-129). 유승익은 이를 정부 중앙부처 간에 통상의외교정책 등 특정 사안에 대

18) 동 제안에는 상품분야 등 제한된 범위의 통상협정, 개발문제를 포함한 경제협력, 정부분야의 대화 등 3개 분야가 포함된다.

해 본질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보다는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더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부처 간의 갈등과 협조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한다(1998). 이러한 요인들을 극복하여 한-에과도르 간의 협력이 상호호혜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3세계 개발도상국에 대한 한국의 경제협력외교는 1987년 대외경제협력 기금을 통한 장기저리의 차관을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 에과도르와는 1983년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이 체결되면서 국제개발협력 외교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대에과도르 경제협력사업은 무상 대외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해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물자 지원 및 중소기업 프로젝트 등을 위주로 추진하였다. 중남미 최초의 유상협력 EDCF 사업은 1995년 에과도르 ‘지방전화망 확충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양국 간 협력이 경제·통상분야에서 개발협력분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2002년 한국 정부가 승인한 ‘산포도밍고 시 상수도 확충’ EDCF 사업이 에과도르 내에서 정치쟁점화 되면서 무산위기를 넘기고 2011년에 가서야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의 대에과도르 개발협력외교는 2010년 9월 꼬레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커다란 전환기를 맞았다. 한국을 자국의 경제발전 모델로 인식하고 있는 에과도르 정부의 요청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으로 2011년 ‘에과도르 전략산업의 수출촉진정책 수립 및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였다.¹⁹⁾ 이는 지금까지는 대에과도르 유·무상 경제협력사업이 경제·사회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의 상품수출 및 홍보를 위한 사업 위주로 추진한데 반해, 최근에는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을 토대로 에과도르에 전략산업의 수출촉진정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타입의 개발협력모델을 발굴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19) 한국개발연구원(2012) 참조.

한국은 2004년부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국 특유의 경제발전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지식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출범한 에콰도르 꼬레아 정부는 한국을 자국의 경제발전 모델로 상정하면서 양국은 ‘가치공유’(김원호 2009, 340-341)를 통한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에콰도르 역사상 최초로 중장기 ‘국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선진 주요공여국의 지원과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한-에콰도르 간의 외교관계는 정무, 경제·통상 분야의 협력에서 개발협력 분야로 다각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에 동 분야에서 협력의 여지는 다대한 바, 한국은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의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은 과거의 대에콰도르 유·무상협력 사업에 있어 국제적으로 비교우위를 확보한 국내 산업분야를 위주로 추진했던 패턴에서 벗어나 DAC 선진공여국으로서 에콰도르의 경제개발과 ‘좋은 삶을 위한 국가계획’에 공헌할 수 있는 방향의 사업을 발굴·추진해야 한다. 둘째, 에콰도르 정부가 대외관계 원칙으로 천명한 상호 호혜적이고 대등한 관계에 기초한 대외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할 것이다.

IV. 결론

본고에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한국의 대에콰도르 대외정책을 주요 외교 이슈와 협력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향후 50년을 대비한 외교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새롭게 고려할 요소로서의 ‘상호문화성과 다국민국가’라는 요인들을 살펴보았으며 대외정책 방향의 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대에콰도르 외교는 냉전체제 하의 주요 외교이슈로서 반공외교와 1970년대에 2차래 발생한 중동 발 오일 파동으로 인해 1980년부터 에콰도르 산 원유를 수입하면서 시작된 여타 대중남미 국가의 외교와 대별되는 석유자원외교, 1991년 9월 남북한의 동시 유엔가입이 안보상황의 개선을 가져오게 되면서 경제·통상 및 국제개발협력 분야로 외교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남북 분단의 대립이라는 특수한 외교환경으로 인해 대외환경의 변화에 걸맞은 변화와는 거리가 먼 제한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김계동 1998, 108).

2007년 취임한 꼬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과거 정권과는 달리 미국에 의존한 전통적인 대외정책에서 탈피하여 ‘시민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건설을 지향하는 독자노선을 추구하며 주권국가로서 대등한 관계, 상호호혜원칙을 중시하며 내정불간섭 등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외교정책을 추구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외교 사안에 따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하겠다.

1980년부터 에콰도르에서 원유 도입으로 시작된 석유자원외고는 에콰도르가 상품 수출 대상국 지위에서 25년간 에너지원 공급국가로 전환시켰고 나아가 정부·경제 분야에 중점을 두었던 양국 관계가 에너지 자원분야에 이르기까지 협력 확대되면서 교역규모를 증가시키기 시작했다. 에콰도르 정부는 1963년에 무역협정 체결 제의에 이어 2010년 ‘개발을 위한 통상협정’ 체결을 한국 정부에 제의하였다. 이는 2007년 꼬레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에 의존한 전통적인 대외정책에서 탈피하여 아시아 태평양, 유럽연합, 중동 및 아프리카까지 적극적인 경제·통상정책을 통해 확대하고자 하는 전략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2012년 말 한-에콰도르 양국은 통상협정 체결을 위한 민간공동연구를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협상 진행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양국 관계는 과거 정부분야의 협력에서 이제 경제·통상, 투자 및 개발협력 등의 분야로 다변화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에콰도르가 제안한 통상협정 체결 추진문제를 전향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에콰도르는 한국과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로서 협력 가능성이 다대하며 안데안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중요한 중남미의 흑자수출시장인 에콰도르의 전략적 가치를 정치적 경제적 관점에서 균형된 시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요한 중남미 산유국이자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국으로서 자원의 공급처 역할은 물론 극심한 무역불균형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에콰도르는 2008년 제정된 신헌법에

서 '상호문화와 다국민 국가'로서 공존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바, 이러한 요인들을 대에콰도르 외교정책 수립에 적절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한·에콰도르 관계는 2002년 노보아(Gustavo Noboa) 대통령과 2010년 꼬레아 대통령의 방한으로 정무, 경제·통상, 투자, 플랜트산업 분야까지 심화·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꼬레아 대통령이 한국개발연구원을 방문하여 국가개발계획 수립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조직과 두뇌집단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한편 한국의 경제발전경험 전수를 희망하였다. 한국은 2004년부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국 특유의 경제발전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지식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에콰도르가 한국을 자국의 경제발전 모델로 인식하면서 양국은 가치공유를 통한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김원호 2009, 340-341).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은 2011년 대에콰도르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으로 '에콰도르 전략산업의 수출촉진정책 수립 및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였다.²⁰⁾

한국과 에콰도르 양국 정상들은 2012년 10월 수교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축하의 메시지를 교환하였다. 이러한 양국의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켜 전략적 협력관계로 설정할 적절한 시점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고휘주(1995), 「제1공화국의 대외정책」, 『한국외교사 II』, pp.309-338.
 국토통일원(1988), 『남북대화 백서』, pp.35-36.
 김기현(2011), 「페루와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의 석유개발과 환경사회운동」,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21권 1호, pp.27-61.
 김계동(1998), 「외교사 측면에서 본 한국외교정책」, 『한국의 외교정책』,
 pp.101-143.
 김달관(2010),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의 등장배경과 변천 과정: 국민국가형성

20) 한국개발연구원(2012) 참조.

- 부터 현재까지」,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21권 2호, pp.24-55.
- _____ (2011), 「에콰도르 탈식민적 국가개혁: 국민국가에서 다국민국가로」, 이베로아메리카, 제13권 2호, pp.1-31.
- _____ (역음)(2013),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 한울.
- 김성주(1995), 「제6공화국의 대외정책」, 『한국외교사 II』, pp.451-477.
- 김영식(1995), 「제5공화국의 대외정책」, 『한국외교사 II』, pp.417-450.
- 김용호(1995), 「제3·4공화국의 대외정책」, 『한국외교사 II』, pp.381-416.
- 김원호(2009), 「한국의 대중남미 외교」, 『한국의 대개도국 외교』, pp.307-341.
- 김윤경(2011), 「1980-1990년대 에콰도르의 원주민운동: CONAIE의 ‘상호문화성’과 ‘복수국민’」, 서양사론, 제107호, pp.201-233.
- 김창훈(2013), 『한국의 외교 어제와 오늘』, 한국학술정보, pp.332-502.
- 농림수산식품부(2008), 『원양어업 50년 발전사』, pp.437-438.
- 박경서(1998), 「한국의 경제·통상 외교」, 『한국외교정책론: 이론과 실제』, pp.235-259.
- 백진현(1999), 「국제협력 및 지역협력외교」, 『한국외교정책』, pp.299-317.
- 외무부(1979), 『한국외교 30년』, p.129.
- _____ (1986), 『대한민국외교연표』, p.281.
- _____ (1990), 『한국의 북방외교』, p.28.
- 외교통상부(1990), 『한국외교 50년』, pp.96-141.
- _____ (2009), 『한국외교 60년』, pp.36-87.
- 외무부(1990), 『한국외교 40년』, pp.412-417.
- 유승익(1998), 「한국외교정책의 분석틀」, 『한국외교정책론: 이론과 실제』, pp.101-128.
- 이민룡(1998), 「한국의 자원·환경외교」, 『한국외교정책론: 이론과 실제』, pp.260-305.
- 이상욱(2003), 『전환기의 한국외교』, pp.995-1002.
- 이택휘(1995), 「제2공화국의 대외정책」, 『한국외교사 II』, pp.339-379.
- 임두빈(2011), 「브라질 외교정책의 변화와 이정표」, 중남미연구, 제29권 2호, pp.163-192.
- 조영현/김달관(2012), 「에콰도르 원주민 사상과 세계관의 복원: 수막 까우사이(Sumak Kawsay)에 대한 이론적 고찰」, 중남미연구, 제31권 2호, pp.127-160.

- 조희문(2008), 「브라질의 통상외교정책과 한국」, 라틴아메리카연구, 21권 3호, pp.49-84.
- 한국개발연구원(2012), 『2011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스리랑카, 에콰도르』.
- 한국무역협회(kita.net) 무역통계자료.
- Acosta, Alberto y Esperanza Martínez(2009), *Plurinacionalidad: Democracia en la Diversidad*, Quito: Ediciones ABYA-YALA.
- Chung, Chung Kil(1985), “Policymaking in the Executive Branch - Application of An American Model to Three Korean Cases,” *Administrative Dynamics and Development: The Korean Experience*, pp. 116-137.
-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l Ecuador(1998).
-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del Ecuador(2008).
- Hernández E., Virgilio(2011), “Ecuador: avances y desafíos de Alianza País,” *Nueva Sociedad*, No. 234, pp.129-142.
- Hoetmer, Raphael(2008), “Resistiendo al Capitalismo Neoliberal en Abya Yala: el Caso del Movimiento Indígena Ecuatoriano,” Rodrigo Montoy Rojas(ed.), *Voces de la Tierra, Lima: Universidad Nacional Mayor de San Marcos*, pp.105-147.
- Jo, Hee-Moon(2009), “Korea’s Foreign Policy Towards Brazil(1959-2009): An Analysis of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Portuguese-Brazilian Studies*, Vol. 6, No. 2, pp.177-203.
- Larrea, Ana Maria(2008), “La plurinacionalidad: Iguales y Diversos en Busca del Sumak Kawsay,” www.institut-gouvernance.org.
-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del Ecuador(2006), *Plan Nacional de Política Exterior 2006-2020*, Quito: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 Montúfar, Cesar(2001), “Crisis, Inequidad y el Espectro Predatario del Estado Ecuatoriano: Interpretación Política de la Coyuntura 1998-2000,” *Revista de Ciencias Sociales*, No. 10, pp. 8-17.
- Oficina Comercial del Ecuador en Corea(2012), *50 Años de Amistad Ecuador-Corea*, pp.6-9.
- Petronet.co.kr, Import and Export Statistics.
- Rosenau, James N.(1980), “Pre-Theories and Theories of Foreign Policy,” *The Scientific Study of Foreign Policy*, New York: Nichols Pub Co; Subsequent edition, pp. 115-169.

- SENPLADES(2009), *Plan Nacional para el Buen Vivir 2009-2013*, Quito: Secretaría Nacional de Planificación y Desarrollo.
- _____ (2010), *Los Nuevos Retos de América Latina: Socialismo y Sumak Kawsay*, Quito: Secretaría Nacional de Planificación y Desarrollo.

유영식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ysyoophd@gmail.com

논문투고일: 2014년 3월 6일
심사완료일: 2014년 4월 7일
게재확정일: 2014년 4월 14일

5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hips between Korea and Ecuador(1962-2012): Analysis of the Foreign Policy from Korea to Ecuador

Yeongsik Yoo
 Dankook University

Yoo, Yeongsik(2014), 5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hips between Korea and Ecuador(1962-2012): Analysis of the Foreign Policy from Korea to Ecuador.

182
 183

Abstract On October 5th of 2012 was the 50 year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hips between Korea and Ecuador. The bilateral relations between these two countries for the past 5 decades can be classified into two periods: First period corresponds to the beginning of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Ecuador in 1962. And covers the entry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o the UN in 1991. Until then the exterior politics of Korea towards Ecuador had been Cold War centric. In the seventies, the petroleum crisis in the Middle East causes Ecuadorian oil importation on accordance with the policy of source diversification for crude oil sources. The second period comprises the step of consolidation of foreign commerce diplomacy and economic cooperation, in which Korea started to develop multilateral diplomacy and regional cooperation by entering OECD in 1996.

Korea's Foreign policy towards Ecuador that developed with the UN was mainly based on the anti-communist ideology which then moved towards foreign commerce and cooperation diplomacy giving importance to economic factors and bilateral relations. With the beginning term of President Rafael Correa in 2007 the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in Ecuador started to change and some different opinions started to surge regarding diplomatic issues concerning the nuclear issu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trade imbalance and the regul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etc. To resolve such problems the factors of the 2008 constitution, the equitable relations as sovereign countries, the principles of mutual benefit and non-interference in national politics that are basic outlines of foreign policy of Ecuador must be taken into account. This paper

aims to expose some alternatives to solve this issues and has the ultimate goal to work to strengthen the relations between these two counties.

Key words Diplomacy, Korea-Ecuador, Bilateral Relations, Economic cooperation, Foreign trade